

# 해원상생 사상의 사회과학적 사유와 통일실천적 가치

박영택

대진대학교 · 교수

- I. 서론
- II. 해원상생사상의 사회과학적 활용성과 사회과학적 연구의 한계
- III. 오선위기 공사와 해원상생사상의 통일실천적 가치
- IV. 결론: 실천적 제언

## I. 서론

남북통일은 상제께서 베푸신 한반도의 미래에 필연적으로 도래할 천지공사이다. 특히 오선위기(五仙圍碁) 공사는 남북통일이라는 과정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선위기 공사는 ‘다섯 신선 중에 한 신선은 주인이고 나머지 네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를 뜻하는데 바둑이 끝나면 바둑돌이 주인에게 돌려진다는 의미’로서 한반도가 반드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며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의 주인이 됨을 의미한다.

상제께서 종도들을 데리고 계실 때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

(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전경』, 예시 28절)

남북통일이라는 미래를 법리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교 사상이 대순사상에 내포되어 있다. 그 중심사상이 해원상생인데 이는 남북통일의 과정 및 목표를 명확히 해주고, 분단의 원과 한을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유익한 학문적 틀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법리에 주목하면서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민족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국내적인 화합, 남북 간의 진정한 화해, 그리고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상황은 대순사상의 핵심인 해원상생 법리의 중요성과 가치가 사회전반에 알려져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된다.

본 연구는 해원상생 사상이 분단이 된 상황 이후 현재와 통일 이후에도 통일실천적 가치가 있음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그 가치가 원한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실천의 근본이 되는 상생의 마음을 생성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통일에 다가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관련 전문가들이 해원상생사상이 인간사와 사회의 전반적 분야에서 그 실천적 가치가 높음을 적시하고 있다. 첫째, 통일의 완성을 후천세상으로 가는 과정으로 가정할 때 사회적 차원에서 官과 民사이의 존경과 사랑이 존재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고통

이 없는 행복한 경제활동의 발전과 조화로운 신분 체계의 형성이 가능하며,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신인지도(神人之道)를 근본으로 하는 윤리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sup> 둘째, 해원상생이 통일기반사상으로서 한민족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기본사상, 민족의 동질성 회복, 국민화합정치의 기제, 남북한 통일의 큰 축이며<sup>2)</sup>, 일 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실천윤리의 대강령, 한국사에 잔재한 오랜 저항의 이념을 뛰어넘는 화평사상, 천지를 구하고 살리는 광구·광제사상<sup>3)</sup>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는 전 세계와 인류의 화평을 위해 선천세계의 영구평화사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천·지·인 삼계를 개벽하고 인간을 개조하여 지상낙원인 후천선경 건설을 위한 도덕심의 생활화를 천명한 실천종교의 원리<sup>4)</sup>이며, 모든 시대에 적용이 가능한 가치로서 인간학, 종교 간의 평화이념, 사회윤리를 내포하고 있다.<sup>5)</sup> 셋째, 해원상생의 실천은 인간의 본능적 해원정신과<sup>6)</sup>, 군생에 대한 사랑과 생명존중 사상의 실천,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 감사하는 생활, 이타적 희생봉사 활동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sup>7)</sup> 우선 종단의 기본사업이 성·경·신을 다하여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고, 통일 시대에도 포덕·교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8)</sup>

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해원상생의 종교적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실천하는 방법 또한 종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필자는 기존 연구자들의 관점과, 학술적인 자료와 객관성의 제한이 예상되는 한계에 유의하면서 해원상생 사상을 사회

---

1) 박용철, 「해원상생의 실현에 대한 고찰」, 『대순사상논총』 4 (1998), pp.224-234.  
 2) 양무목, 「통일기반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 『대순사상논총』 4 (1998), pp.84, 145.  
 3) 이경원, 「해원상생의 의미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4 (1998), pp.561-567.  
 4) 유재갑, 「해원상생 사상과 영구 평화사상: 그 실천적 의미」, 『대순진리학술논총』 4 (2009), p.160.  
 5) 김방용, 「해원상생 사상과 그 현대적 의의」, 『대순진리학술논총』 4 (2009), pp.292-301.  
 6) 이항녕, 「해원상생 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4 (1998), p.13.  
 7) 김홍철, 「해원상생사상과 그 실현 이념」, 『대순진리학술논총』 4 (2009), pp.75-89.  
 8) 김정태, 「해원상생의 실천 방안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4 (1998), pp.483-485.

과학적인 관점에서 차별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한편, 해원상생의 통일실천적 가치를 연구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사회과학적 연구주제를 해원상생 사상과 접목하는 과정으로서 과연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한가와 어떠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원상생사상의 사회과학적 유용성을 사회과학의 원인과 해결과정, 인간 본성의 제고, 그리고 시공간적 영역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아울러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해원상생을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한계를 규명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질적인 측면에서 해원상생 사상이라는 심오한 종교적 법리를 다루는 것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을 적시하였다.

## II. 해원상생 사상의 사회과학적 활용성과 사회과학적 접근의 한계

### 1. 해원상생 사상의 사회과학적 활용성

해원상생은 세상을 살아가는 ‘상생의 도’로써, 서로 잘되게 하고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사상적 위치에 있다. 특히 인간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원하는 원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신은 사회과학적인 견지에서 의미가 있다.<sup>9)</sup> 과연 해원상생사상이 사회과학적으로 유용한가, 왜 유용해야 하는가? 연구자는 두 개의 명제를 사회과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밝히는 것이 해원상생을 특징한 사회현상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할 때의 바람직한 접

9) 김영진, 「남북한 통일과 해원상생 사상 연구」(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p.39-79.

근자세라고 판단했다. 여기에서 ‘활용성’의 개념은 사회과학을 사회현상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과학적 혹은 학문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해원상생사상이 모든 사회현상 혹은 인간사회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하는 물음에 귀결된다. 사회과학에서는 위의 유용성을 발휘하는 주 기능을 이론이 담당한다. 이론은 법칙을 설명하는 진술이며, 좋은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적 일관성과 간결성을 지니면서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설명력이 있어야 한다.<sup>10)</sup> 따라서 학자들은 좋은 이론, 유용한 이론을 만들기 위하여 보통 다음의 일곱 단계를 거치는데, 이론 명시→가설 추론→가설의 실험적 혹은 관찰적 검증→용어 정의→가설에 포함되지 않은 개입변수의 제거 및 통제→검증방법 고안→검증에 통과하지 못한 이론 단념 등<sup>11)</sup>을 말한다. 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유용성이 없는 이론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사상은 말 그대로 사상이며 이론의 유용성보다 훨씬 큰 영역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원상생의 유용성은 이론이 가진 다양한 기능보다 상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오히려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해원상생사상이 모든 내용을 자료화하여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영역적 측면, 연구대상 측면, 연구의 범위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사회과학적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 1) 사회갈등의 원인 및 대안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연구영역과 가설의 확장

사회과학 이론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인간사회의 모든 문

10) 김용진·김지희 공저, 『정치학 연구방법론: 경험과학 연구의 기준과 설계』(서울: 명지사, 2005), pp.54-67.

11)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pp.13-17.

제의 근원을 파헤치는 데 있다. 각각의 이론에는 사회현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도 반영되어 있다. 20세기 초에 들어와 두드러졌던 3개의 패러다임, 즉 사회를 바라보는 중심 시각은 현실주의, 이상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였는데,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하여 계급투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론은 사회주의 체제의 소멸과 더불어 공산주의의 유용성이 현저히 떨어진 가운데 외면되고 있으며,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만인 對 만인의 敵’ 상황인 홉스의 성향으로 인식한다. 즉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하고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국제사회를 해석하는 입장에도 반영되어 세계라는 공간에서는 체제를 유지하는 질서가 없으므로 힘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시각이다.<sup>12)</sup> 따라서 국가는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익을 위해 힘을 수단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힘이 없으면 동맹을 맺는데, 이는 상생에 의한 동맹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따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무질서에 기인한 전쟁은 정치행위의 연속이며, 사회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갈등의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원한은 덮어두고 상생하기보다는 국가는 생존하기 위해 힘을 기르고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타당한 조치일 것이다.

이상주의는 자애롭고 화합하는 칸트의 인간본성에 근거하여 국가 간의 공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sup>13)</sup> 국가가 꼭 세계의 중심이 아니더라도 비정부기구 혹은 유엔 등 국가 간 공조기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한 국가의 힘으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기아, 난민, 마약, 인신매매, 위폐 등 국제 범죄, 내전, 종교분쟁, 테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

12) 강성학, 『무지개와 부엉이』 (서울: 박영사, 2010), pp.477-493.

13) 같은 책, pp.502-507.

제적 기구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상주의는 한편으로 자유주의라고 칭하는데, 현실주의가 주로 관심을 갖는 전쟁 혹은 동맹보다는 경제 및 사회분야, 인권 문제 등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이상주의는 여전히 세계의 주류인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정책 및 행동이 계속됨을 설명하지 못하며, 한편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지도 못한다. 이상주의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인간의 선한 본성이 협력적인 국제관계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으로 인하여 또 다른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이론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

왜 일반적인 이론이 사회갈등 원인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역사가 흐를 때마다 혹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론의 도전을 받는 것일까? 그것은 사회과학을 지탱해주는 인간의 지식이 전통, 권위, 직관, 사유력, 감각적 경험, 상식 등 지극히 인간적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sup>14)</sup> 우리가 표현하는 논리라는 것이 합리적 활동, 일반화의 추구, 인과관계의 파악, 수식표현 능력<sup>15)</sup>, 반증 및 수정 등 개방성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의 경험에 근거하여 연역하더라도 그 경험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즉 진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까지 어떠한 이론도 일관성 있게 올바르게 세계와 사회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해원상생사상은 인간사회 모든 갈등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재발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상황과 충돌하면 많은 이론이 그 상황을 일반화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이 연구의 연역적 추정(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최종단계의 상황)이 가능한 영역까지도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동적이며 개방

14) 김경동, 「오늘날 사회과학방법론을 둘러싼 쟁점들」, 『현상과 인식』 23 (1982), pp.150-152.

15) 일례로  $E=mc^2$ 를 들 수 있다. 최소의 변수로 가장 간결하게 표현하면서도 사실은 방대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다.

적인 사상이다. 단주의 원과 요임금의 사례를 근거로 해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역사가 반복되고 세상 도처의 혼란 상황이 순환하는 과정의 근본을 일깨워 준다는 차원에서 사회과학적인 유용성이 크다 하겠다.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리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 기록의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전경』, 공사 3장 4절)

한편 해원상생은 법리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바르게 돌아가게 하는 이치이자 가장 효과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해원상생의 법리에 주목한다면 국가 또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힘을 겨루는 방법 등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바른 방법은 바로 근본적인 원의 해소다.

단주의 원으로부터 시작된 원의 역사는 각 지역, 국가, 종족, 민족 등 각 분야에 근원적인 척을 만들어 놓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이 같은 원을 상생의 도로 풀어서 조화롭게 만든 것이 다음의 삼계공사인데, 삼계공사는 천지의 막힌 곳을 해소하는 근원적인 공사로써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사회과학의 문제해결 방법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



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전경』, 공사 1장 3절)

지금 사회과학은 물론이며 인문학 및 자연과학 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범위 혹은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영역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느 특정 학문의 영역도 침범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자신의 영역에 대한 뿌리 깊은 성찰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더라도 다른 영역의 학문이 한 단계 높은 방법론을 개발할 경우 곧바로 이웃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것은 주제에서부터 소재, 방법론, 연구 인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원상생사상은 사회과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과학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과학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모든 이론의 시작이 가설에서 시작하여 검증되어 일반적인 사고, 즉 하나의 법칙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가설이 인간계에 그치지 않고 삼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 2) 인간의 도덕성과 정신적 영역에서의 가치와 잠재성 확장

해원상생사상은 세상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론보다도 인간 본성의 밝고 맑은 면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간의 가치와 잠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원을 풀다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고 순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연 현

재의 사회과학은 인간 본성에 얼마만큼 주목하고 있는가? 국가가 우선인 분위기 하에서 인간 본성은 중요하지만 다루어도 별반 이점이 없는 주제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칸트와 흄스가 출현하는 시기에 출몰하기 시작한 서구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이론의 중심적 연구 대상은 인간의 본성이었다. 인간은 사회과학 이론과 패러다임의 의식적, 인식적, 인간적 배경이며 토양이다. 이론가 없이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사람이 없는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존재하는가? 인간의 본성은 사회의 주체이며 객체다.<sup>16)</sup> 그러면서도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을 사회현상의 주체라기보다는 마치 사회현상의 숙주인양 경원시하고 있다.

해원상생사상은 해원의 첫 단추에서부터 그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인간애를 담고 있다. 인간의 원한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도 따듯한 인간 사랑의 근거를 담고 있는데, 이를테면 동가의식(同家意識)과 인, 동병의식(同病意識)과 자비, 동죄의식(同罪意識)과 용서, 동심의식(同心意識)과 이해, 동체의식(同體意識)과 해원이다.<sup>17)</sup>

이러한 해원상생사상의 인간에 대한 인식이 지니는 사회과학적 활용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갈등의 원인을 ‘나’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해원상생사상은 실익을 전제로 한 협상이 아닌 공존과 화합의 실질적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본연의 연구대상인 인간성의 영역에서 활용성이 높다. 둘째, 해원상생사상의 신분차별 철폐와 이타정신은 이상주의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수준의 진정한 협력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내전과 분쟁, 경제적 문제에 접근할 때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고, 실익을 얻기 위하여 군사력과

16) Donald Polkinhorne, 김승현·이경숙·심미선·황치성 역, 『사회과학방법론』 (서울: 일신사, 2003), pp.246-286.

17) 이항녕, 『현대문명과 대순사상』 (서울: 일심, 2004), pp.118-127.

경제력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원상생사상을 적용한 해결 방식은 국가간 갈등의 해결방법으로서 적절하며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의미도 있다. 마지막으로 해원상생사상은 동양사상의 우수성과 인간애에 대한 진정한 철학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서양사상은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국력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순수한 민족사상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기도는 권력 쟁탈의 수단에 이용되어 약소국의 민족정신이 울곧게 뺏어나가는 것을 방해해왔다. 이와 반대로 동양사상의 깊은 뜻을 함유한 해원상생사상은 아래 예에서 보듯이 민족의 정신이 내재된 인고의 사상이므로 사회과학 영역의 중심적 이론으로서 인간사회에 대한 성찰의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해원(解冤)은 척(感)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품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의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해원상생·보은상생은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되게 하라”는 진리이니, 화합·단결·상부상조를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토록 교화하라.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는 데서 반발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는 법이다.<sup>18)</sup>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전경』, 교법 1장 9절)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댓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 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

18)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27.

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 주셨도다.(『전경』, 교법 1장 10절)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전경』, 공사 1장 32절)

후천에서는 그 님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전경』, 교법 1장 68절)

### 3) 시공간적 연구영역과 사회과학 명제의 종교적 영역으로의 확장

사상은 전적으로 어떤 실험이나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회과학자가 혹여 종교사상이 무한대적으로 시공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다면 사회과학이 관찰된 지식(귀납적 진실)과 진실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 불과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된 가설(연역적 진실)을 검증하는 작업에 머물고 있음<sup>19)</sup>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해원상생의 또 하나의 활용성은 그 사상이 선천과 후천, 그리고 천지인 삼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바, 시공간적 영역의 무한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19) Chava Frankfort-Nachimias & David Nachimias,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pp.3-50.

첫째, 사람의 능력은 아무리 비범하더라도 제한적인 공간에 머문다. 인간에게만 국한된 사회과학은 무제한적인 시공간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작업이 연구 분석수준의 설정이다. 연구 분석 수준은 나무(미시적)를 볼 것인가, 숲(거시적)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개념이다. 분석 수준에 따라 연구의 초점이 달라지고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또한 인간 본성, 국가 본성, 체계 본성 등으로 분류하여 그 수준에서의 고려되는 변수를 고려하고 선별한다. 또한 패러다임은 가정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되는데, 그 가정들도 대상에 대한 밑그림(환경)을 따지고 환경이 무엇이며, 밝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할지 등을 따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알 수 없는 분야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외면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둘째, 종교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대상을 다루는 영역은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하기도 근본적으로 파헤치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즉, 인간의 무한한 인식론에 대한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은 구성주의 이론에서 주장되고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개별적으로 고유한 인지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 구조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20)</sup> 철학적 영역에서도 칸트는 지식(붕어빵)이 선천적 인식구조(붕어빵틀)와 인간의 경험(밀가루와 팔)이 결합된 것<sup>21)</sup>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

20) 김관수 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서울: 학지사, 2000), p. 24. 이러한 구성주의에 대해서 Cunningham은 구성주의를 객관주의(objectivism)에 대한 ‘대응적 패러다임’이라고 하였다; D. Cunningham, *Assessing constructions and constructing assessments: A dialogue. Constructivism and the technology of instruction: A conversation*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2), pp.35-44.

21) I. Kant/최재희 옮김, 『순수이성비판』 (서울: 박영사, 1999), pp.73-74. 지식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칸트의 견해는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의 분리에 기초한 합리론과 경험론 모두에 대한 응답이다. 특히, 칸트는 데이비드 흄(D. Hume)의 급진적 경험론을 비판한다: S. Warren/ 이성화 옮김, 『변증법과 정치이론』 (서울: 인간사랑, 1988), pp. 51-53.

에서 인간의 사유에 의해 신, 인간의 자유, 영혼불멸 등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22)</sup> 역설적이지만 위와 같은 논쟁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서는 과학이라는 목적을 달성(과학이라는 빌미로)하기 위하여 연구범위와 대상을 설정한다. 구분한다. 이는 인간의 인식범위나 영역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시공간을 제한함으로써 가치 있는 명제(연구주제 혹은 논점), 즉 인간문제와 사회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주제들을 소멸시키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해원상생은 이러한 인간사유 논쟁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원상생은 사회과학의 많은 명제들이 다시금 조명되고 또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 2. 해원상생의 사회과학적 연구의 한계

전술하였다시피 다수의 전문가들이 해원상생사상을 현대적 의의와 개념, 실천적 가치와 세부적 실천 방안 등의 영역에서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원상생의 학문적 뿌리를 굳건히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씨를 뿌려 포덕의 기운을 융성하게 하는 결실을 맺는데 유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전문가들은 사회과학적인 접근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그 종교적 법리의 뿌리를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고려하고자 한다.

### 1) 연구 목표에 대한 집착과 극단성의 존재

22) 이수윤, 『철학개론』 (서울: 법문사, 1996), pp.100-101. 라이프니치의 이러한 객관적 관념론은 신Platon주의적 신비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岩崎武雄/허재운 역, 『서양철학사』 (대구: 이문출판사, 1987), pp.155-156.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길을 따라 가는 일종의 행위 개념이다. 따라서 다른 주장이나 이론과 상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극단으로 가다보면 이상주의자, 형식주의자, 교조주의자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보다는 학문적 다원성과 깊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때로는 필요하다. 해원상생사상은 인간 및 세상을 개조하여 후천이라는 세상을 제시한 긍정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연구도 사회가 한층 발전할 수 있다는 동기에서 출발해야 보다 많은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득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식의 원천은 감각적 경험, 상식, 관습, 직관, 신비주의 등 그 출처가 다양하다. 따라서 사상과 이론에 정통하기까지 끝도 없는 의문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극단적인 편견이나 주장은 연구자의 올바른 연구 방향을 헤치기 십상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자료의 신뢰성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상호주관성이다. 서로 다른 주관을 가지고 있는 둘 이상의 학자가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할 때 서로 다른 검증을 거치고 나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올바른 이론을 위해서는 한 개인의 선입견과 편견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 2) 과학적 오류의 상존 가능성

사회과학연구 방법론은 그 특성상 오류가 상존하며, 이로 인하여 해원상생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 시에도 이러한 가능성은 상존한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핵심 가정을 함에 있어서 존재론적 가정, 인식론적 관점, 그리고 가치론적 관점이 병존한다는 점이다. 존재론적 가정은 모든 상황에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성과 비결정성, 그리고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인간 중심의 시각

이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논하는 인식론적 관점과 다소 배치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는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고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형성되므로 세상을 판단하는 이해와 해석의 인간 행위가 요구된다고 믿고 있다. 가치론적 관점은 처음부터 인간의 가치의식 자체, 혹은 당위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선입견이 상당히 관여되며, 연구결과를 명료하게 하려는 의도가 늘 반영된다.<sup>23)</sup> 따라서 해원상생과 관련한 가정에서 연구자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는 항상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의 압박을 받는데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현상을 단순화하려는 시도를 하며,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상실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의 연구 경향에서는 급격한 비약과 우연한 발견, 지나친 분권화 및 세분화, 확률적 또는 통계적 법칙의 남용, 모호하고 불분명한 명제 설정, 인과적 설명의 부족, 목적 지향적 지식에 의한 사회 교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연 해원상생에 대해 이러한 환경 하에서 아니면 연구자 자신이 그러한 한계나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한 채 접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해원상생사상은 사회과학의 탐구영역을 일부 포괄한다. 사회과학은 세계로부터 개별 국가, 그리고 사회의 제반 영역과 인간사의 현상을 과학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하며 예측하는 학문적인 주제이다. 이러한 사회과학의 핵심적 도구가 이론이나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해원상생사상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삼계의 현상을 주제로 하고 있어서 하나의 시각 혹은 복합적인 분석요소를 동원하더라도 완전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간의 사유능력과 사회과학적 접근의 한계를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요구된다.

---

23) 김경동, 앞의 글, pp.153-156.



### 3) 지식의 패러독스 폐해

지식의 패러독스는 지식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잘못 사용되거나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특히 어느 한 집단이 학문적이고 방법론적인 체계를 견고하게 세워 다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주장의 설 땅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연구 전통을 수립하고, 연구기회를 조정하며, 위상을 배분하고, 일탈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일삼는다. 이를 유리스틱(heuristic) 혹은 연구 거버넌스라고도 한다. 유리스틱은 단순히 과학적인 신념이 아닌 정치적인 후견과 경제적인 우월성이 결합된 것이다. 유리스틱 범주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하찮은 것이고,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된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주장하는 과학성은 열린 마음 혹은 수용적 태도를 견지하지 않을 경우 패러독스의 전형이 된다. 과학적 지식이 무지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지식의 불완전성을 무시한 환영에 불과하다. 유리스틱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과학에서 요구하는 신뢰도 결국은 정치적이고 탈과학적인 집단의 보증에 불과한 것이다.<sup>24)</sup> 유리스틱이 결국은 실제로는 새로운 지식과 이해의 지평인 무지와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셈이다.<sup>25)</sup> 삼계를 대상으로 하는 해원상생은 인간의 능력으로 볼 때는 무지와 미지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패러독스에 빠지지 않는다면 세상사에 대한 무한한 지식의 공간에 연결해 주는 매우 가치 있는 통로로써 활용할 수 있다.

24) 김용진, 『과학패권과 과학민주주의』 (서울: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pp.25-94; 김용진, 「과학적 신념, 신뢰와 지식의 패러독스」, 『신뢰연구』 16 (2006), pp.3-19.

25) 김용진, 위의 글, pp.95-129.

### III. 오선위기 공사와 해원상생사상의 통일실천적 가치

#### 1. 오선위기 공사의 실제성

남북통일은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서 확인된다. 때가 되면 통일 환경이 조성되고 남북한이 주인의 입장에서 서로 해원상생하여 한민족은 물론 전 인류의 정서를 모두 충족하는 운수에 기반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오선위기 공사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주변정세에 대한 많은 공사가 있는데 러·일전쟁<sup>26)</sup>, 중·일전쟁, 1·2차 세계대전<sup>27)</sup>, 그리고 일본의 멸망에 관한 것<sup>28)</sup>

26) 『전경』, 예시 23절, “이제 동양 형세가 위급함이 누란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서양에 넘어가리라” 깊이 우려하시사 종도들에게 계묘년 여름에 “내가 일로 전쟁(日露戰爭)을 붙여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전경』, 예시 24절, 또 상제께서 “이제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四十九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 풍을 붙여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고 말씀하시사 공사를 행하셨도다.

27) 『전경』, 공사 2장 25절, 공신의 집에서 또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이 뒤에 전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고 물으시니 혹자는 있으리라고 하고 혹자는 없으리라고 아뢰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천지 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오”라고 하시사 전쟁기구를 쟁겨 보신다면서 방에 있는 담뱃대 二十여개를 거두어 거꾸로 모아 세우고 종도들로 하여금 각기 수건으로 다리위와 머리를 동여매게 하시고 또 백지에 시침주를 써서 심을 부벼 불을 붙여 들게 하고 문창에 구멍을 뚫어 놓은 다음에 모두 담뱃대를 거꾸로 매게 하고 “행오를 잃으면 군사 상하리라” 이르고 종도들로 하여금 뒷문으로 나가서 부엌으로 돌아와서 창 구멍에 담뱃대를 대고 입으로 총소리를 내게 하고 다시 변소로 돌아와서 창 구멍에 담뱃대를 대고 다시 총 소리를 내게 하고 또 헛창으로 돌아들어 그와 같이하되 궁을(弓乙)형을 지어 빨리 달리게 하니 늙은 사람이 씨근덕 거리더라. 다시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이 말세를 당하여 어찌 전쟁이 없으리오. 뒷날 대전쟁이 일어나면 각기 재조를 자랑하리니 재조가 월등한 나라가 상등국이 되리라.” 이 공사가 끝나자 천고성이 사방에서 일어났도다.

28) 『전경』, 공사 2장 4절, 상제께서 어느 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 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 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 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 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 자를 너희들에게 붙여 주노니 잘 지키지어다”고 이르시사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 뿐이니 모든 일을 받게 하여 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삷도

등이다. 미래에는 한반도 주인인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구축하여 통일을 완성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지기통일의 중심이 되는 천리적(天理的) 운명을 가지고 있다.<sup>29)</sup>

오선위기의 운수공사는 사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결정이다. 동북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2차 대전과 해방, 그리고 분단의 과정 등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기적과 같다. 더불어 지금은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과연 오선위기대로 통일이 될 것인가, 통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는가? 한반도의 운명을 현실적으로 고찰해보면 도저히 통일이 불가능할 것처럼 복잡한 구도 속에 놓여 있다. 주변국은 약하다 싶으면 서로 가지려고 하고, 강하다 싶으면 서로 제 편을 만들려고 한다. 그 덕에 한국이 약할 때는 서로의 견제에 의하여 살아남고 커가고 있을 때는 균형추 역할을 하며 국력을 키워갈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존재다. 주변국은 강한 통일한국, 혹은 어느 한편이 될 수 있는 통일한국을 경계한다. 중국과 일본, 미국이 모두 남북한과 관계를 맺는 등거리 정책 또는 현상유지 정책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한 편이 되거나 강한 한국보다는 분단된 상태를 원한다. 국내적으로도 통일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계층이 존재한다. 통일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되고, 계산하기 어려운 통일비용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미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터민의 사회 부적응 등 남북한 간의 장기간의 분단에 의한 이질화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적인 문제점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오선위기에 큰

---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

29) 박영수,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법리에 의한 남북통일 전망」(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61-66.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선위기의 징후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우리 한국이 한반도는 물론 주변정세의 핵심적 조정자로서 진로를 조율하고 있다.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장기간 구축한 가운데 한국이 가장 밀접한 동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고, 러시아는 옛 소련의 영화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대재앙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이 극우강경정책을 펼치는 것도 생존의 몸부림이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선진화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자스민 혁명의 여파로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를 드러내놓고 지원하는 국가도 줄어들고 있다. 한류 패러다임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드문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국가로서 점차 대한민국의 위상은 북한의 쇠퇴에 반비례하여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취약한 3세대 리더십과 경제력, 그리고 독재에 허덕이는 주민의 원성이 심대하여 오선위기 공사의 결실이 맺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 2. 해원상생 사상의 통일실천적 가치

남북한 통일은 단순하게 보면 2개의 체제가 합해지고 60여 년의 세월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두 개의 민족이 물리적으로 합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틀을 다시 세우고 모든 법을 늘어난 영토와 국민에 맞게 고쳐야 한다. 통일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군사적 경계(한·중 접경: 1,360km, 한·러 접경: 17.2km)를 이루게 되어 과거 북한의 맹방인 두 개의 강대국을 상대하게 된다. 영토·영해·영공이 2배 이상 늘어나는데, 영토는 9만9천 평

방킬로미터에서 22만2천 평방킬로미터로 확대된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경계심을 해소할 수 있는 군사력도 재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과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원상생의 덕목이다. 국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주변국과 상생하여 국경 분쟁이나 난민 발생 등 제반사항을 순조롭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주민과 북한주민, 남한국민과 남한국민, 그리고 남북한 국민 간에 존재하는 한과 원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 중심 덕목이 해원상생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을 중심으로 과연 해원상생이 어떠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앞서 다른 종교는 어떠한 관점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들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해원상생의 통일실천적 가치를 비교분석하는데 유의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및 천주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 통일교, 그리고 대중교의 통일 이론 혹은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의 통일에 대한 개념은 기독교적인 정의와 사랑,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나, 다양한 종파, 특히 진보적 진영과 복음주의권의 갈등에 의하여 아직은 미완성의 상태다. 기독교의 민족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늘 궤를 같이 해온 측면이 많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독교의 통일에 대한 원칙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면서 확고한 반공정책에 기반하고 현실참여적인 다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이다. 아울러 기독교에서의 통일운동은 보수와 진보라는 갈등구조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중심이 된 민중적 통일운동으로 진행되다가 양대 진영이 다시 결합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선언’(2009년 3월 1일)을 계기로 일단은 봉합된 것처럼 보인다. 한편, 3.1선언에서는 국민, 남북한 정부, 주변 4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라는 형식으로 교회가 통일의 중심축인 남북한과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도 관계하

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운동을 선점하기 위하여 모든 교회운동에 통일운동을 접목하는 모습이 관찰된다.<sup>30)</sup>

천주교는 기독교와 같이 분단의 충격에 따른 반공적 태도와 강한 분단 지향성의 세력이 공존하는 가운데, 진보측의 민족의 재통합과 보수측의 교회의 재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병존하고 있다. 이는 천주교 또한 기독교처럼 사제 집단과 평신도 집단, 그리고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으로 통일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인한다.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교회의 제도적 이익과 영향력 수호, 혹은 선교적 목적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교회의 재통합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평신도, 정의구현사제단, 수도자들은 통일을 민족의 복지 증진 또는 천주교회의 봉사라는 맥락에서 통일운동이 전개되며, 교회 밖에서의 통일운동과 연계하려는 민족의 재통합이란 입장을 견지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족교회운동, 단계론적 통일지상주의 운동, 정교분리적 교회재일치 운동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sup>31)</sup>

원불교는 창시자인 소태산의 법리인 ‘마음의 평화, 종교 간의 화합과 평등, 해원 상생,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조화’ 등에 근거를 두고 수제자들의 노력으로 발전하는 형태인 바, 원불교 사상이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에 이르는 지침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태산의 수제자인 송규의 중도주의(中道主義)로 이념적 갈등을 극복한다고 하며, 김대거의 화공론(和共論)으로 공산주의와 화해하며, 이광정의 통일대도론(統一大道論)으로 대해원, 대사면, 대화해, 대수용, 대협력, 대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2)</sup>

통일교는 통일을 종교적 섭리이자 교리적 운명, 우주적인 귀결

30) 이만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선언의 역사적 의의」, 『기독교와 통일』 3, pp.7-37.

31) 강인철, 「종교와 통일운동」, 『종교문화연구』 창간호 (1999), pp.35-61.

32) 박광수,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원불교」, 한국신종교학회 발표 논문 (2000. 12. 16), pp.51-68.

로 해석한다. 특히 분단을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립구도로 설명하고, 남북통일이 세계평화로 가는 핵심적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통일교의 산하조직 모두가 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해야함을 강조한다.<sup>33)</sup> 대종교는 평화통일을 위하여 단군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문화의 대화합이라는 취지로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sup>34)</sup>

불교는 원광법사의 호국사상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호국사상과 세속5계 정신에 의해 가치관의 혼란을 정리하고, 상무적 인간관계를 존중하는 정신적 분위기를 만들었던 신라의 통일정신에 대한 경험적 자부심이 대단하다. 통일과 관련한 개념은 첫째, 화엄경에 담겨 있는 대승불교의 원융무애(圓融無礙, 모나지 않고 둥글며, 크고 가득하며, 화합하여 섞여, 걸림이 없다) 정신으로서 남북한의 갈등의 역사를 해소하고 마음속의 한을 풀고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화해와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둘째, 만법귀일(萬法歸一, 모든 것이 마침내는 한곳으로 돌아간다)의 절대 평등의 정신으로 평화적인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5)</sup>

천도교에서는 불연기연(不然其然,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과 현재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생명현상을 나타낸 말, 사물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한 쪽만 보지 말고 불연과 기연으로 살펴야 한다.) 사상이 평화를 위한 인식론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이 상대방을 인정한 상태에서 소통할 수 있고, 남과 북이 주장하는 바를 포용하는 제3의 방식에 의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무위이화(無爲而化), 시천주(侍天主) 조화정(造化定), 후천개벽(後天開闢), 그리고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사상도 결합하고 있다. 즉, 불연기연은 평화로운 인식의 토대이고, 무위이화와 조화정은 평화에 이르는 방법, 시천주와 신인간은 평화를 만드는 존재, 동귀일체

33) 김범연, 「종교문화연구」, 한국신종교학회 발표 논문 (2000. 12. 16), pp.80-91.

34) 원영진, 「평화통일과 대종교」, 한국신종교학회 발표 논문 (2000. 12. 16), pp.31-47.

35) 박세일, 「한반도 통일과 불교의 역할」,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7-1, pp.57-59.

와 후천개벽은 평화로운 사회와 역사가 이미 보장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일에 대해서는 3.1독립운동의 주도와 독립자군의 마런 등의 활동에 기반한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평화통일에도 이러한 전통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6)</sup>

앞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각각의 종교는 분단에 대해 상이하게 접근하거나 경험적인 면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접근으로 통일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고, 지나친 정치 성향의 개입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근본적인 해결을 종교적으로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는 다양한 종파, 혹은 성직자와 일반 평신도, 진보와 보수 등 계층 간의 대립으로 방향성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원불교는 모든 교리와 수제자들의 통일 논리를 엮어 통일 논리의 맥락을 만드는 과정에 있으며, 통일교는 통일이 곧 세계평화로 가는 종교 섭리적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대종교는 단군사상을 정점으로 한 민족 통합을 지향한다. 이에 반하여 불교와 천도교에서 종교의 핵심적 법리와 통일이 라는 주제를 잘 집목시켜 진전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분단 이후 모든 종교계는 통일이라는 숙명적인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통일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종교의 핵심 법리 혹은 교리를 실천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교인들의 통일운동의 참여에 대한 현실적 욕구, 험벗고 굶주리고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외면할 수 없는 숙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앞서와 같이 계층의 대립으로 인한 혼란도 극복하고, 법리적 근거를 확실히 세워야 하며, 타종교에 선점당하지 않고 싶은 조급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절차나 순서를 밟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대북지원, 북한 종교인과의 교류 등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순사상의 심오한 법리 중의 하나인 해원상생사상이 자연스럽게

36) 박세일, 앞의 글, pp.246-263.



분단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법리로써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해원상생사상은 어떠한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도 그 실천 개념과 방법에 있어서 논쟁의 소지가 없다. 즉, 모든 사회적 갈등의 근원을 밝히고 해소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분단의 원과 한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그 방법에는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그리고 국제적인 모든 요소가 결합된다. 남과 북은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체제이며, 남북갈등 못지않게 남남갈등이 존재한다, 남북은 각각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력을 보유함에 따라 늘 일촉즉발의 상태다. 경제적으로 남북의 격차는 심대하며, 북한은 남한의 원조를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게임인양 조율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문화와 종교, 사회분야에서의 이질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세대에서 그 심각함이 우려된다. 또한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분단 민족이다. 서로 총칼을 겨누는 상태에서도 민족인지 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제사회는 한반도를 돌아볼 틈도 없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결론적으로 언뜻 보면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해원상생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릴 수 있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실천의 첫 단추가 해원이므로 해원의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실천적 가치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1) 통일지도자와 통일국민의 핵심 덕목

왜 우리에게서 빌리(Willy)가 없을까? 독일통일의 가장 큰 기여자는 독일국민이지만 국민의 통합적인 통일의지를 일구어 낸 것은

전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1969~1974년 총리 재임, 1964~1987년 독일 사회민주당 당수, 1971년 노벨평화상 수상)다. 그는 동방정책을 내세워 먼저 독일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동·서독 기본조약(1972년)을 체결함으로써 양독 간의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였다. 또한 소련과는 독·소불가침조약(1970년)을 체결하고, 1970년 12월 7일에는 나치가 40만을 학살한 폴란드의 국립묘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폴란드 국민에게 사죄하였다. 이를 계기로 독일인을 대하는 유럽인의 경계심과 적개심이 풀리기 시작하였고, 독일국민도 이때부터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브란트는 1973년에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가했던 만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러한 행동은 독일 국민이 총리를 믿고 정략적인 정치행위를 경계하고 일관성 있게 통일정책을 지원해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서독은 패전 후 첫 총리인 아데나워정권에서 기민·기사 동맹과 사민당 간의 대연립이 추진되어 서독국민 간의, 그리고 동·서독국민 간의 화해를 목표로 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브란트 시절에는 사민당과 자민당 간의 연립정부가 수립되어 대다수 서독 국민이 지지하는 동방정책을 만들고 이를 추진할 수 있었다. 야당도 통일정책에 관해서는 양보하는 융통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정치적 결속은 독일통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브란트의 연립정부에서 시작되어 사민당 출신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1974~1982년), 기민당 출신의 헬무트 콜 총리(1982~1998년)에 까지 이어져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하였다.

우리 국민은 독일 통일의 교훈을 논하면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지를 간과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통일정책은 냉전기에서 탈냉전기로 이어오기까지 주변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통일정책에 주력한 나머지 국민을 정치적으로

단합시키는 데는 소홀하였다. 역대정부의 통일 정책을 개관해보면,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1948. 12, 이승만정부)→유엔감시 하의 남북 자유총선거(1960, 민주당정부)→선건설 후통일(1966.1)·평화통일구상(1970.8)·선평화 후통일론(평화통일 3대원칙, 1973.6, 박정희정부)→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1, 전두환정부)→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1988.7)·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 노태우정부)→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8, 김영삼정부)→대북포용정책(1998.2, 김대중정부)→평화번영정책(2003.2, 노무현정부)→민족공동체통일방안(2006, 이명박정부)→한반도신뢰프로세스(2013, 현 정부)로 이어져 왔다. 분단 이후 60여 년 밖에 되지 않은 국가에서 매 정부마다 다른 명칭, 다른 내용의 통일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어느 정부도 前 정부의 대북정책의 장점과 성과를 진심으로 계승하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은 일관된 대남무력적화통일을 견지하고 있다. 적의 똑같은 공격 방법에 우리 매번 다른 방법을 사용하니 북한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덤비고, 주변국은 확신이 없어서 망설인다. 우리 국민은 분단 이후 산발적인 국가안보위기 상황, IMF 경제위기,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필요할 때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뭉치는 가능성 있는 국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인의 부덕인지 국민들이 진정으로 화합하지 못한 탓인지 단 한 번도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통일정책을 경험하지 못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해원상생의 발화는 먼저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이념적인 대립과 전쟁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의 동기가 바로 해원이다. 원한을 풀지 않고서는 진정한 통일의 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는 분단 이후 여순반란사건, 제주 4.3폭동, 6.25전쟁을 겪으면서 같은 민족 간에 많은 한과 원을 가지고 있으며, 근자에 들어서도 광주 민주화운동 등 지역적,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경험에 의하여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에게도 정치력이 있고 진정으로 화해하고자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원과 한을 가진 많은 국민을 헤아려 상처를 치료하고 난 후 통일정책을 내세운다면 매 정부마다 무늬나 색깔이 다른 통일정책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가 주도하여 북한의 독재정부를 몰아내고 우리의 주권이 미치도록 하는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체제로 만드는 단순한 개념이다. 그 이후에 헐벗고 굶주린 북한주민을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어찌 보면 단순한 통일을 우리 지도자들이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인을 비롯하여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끼리 적어도 우리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문제에서는 힘을 합해야 하는데, 그 복잡한 정치적 이해와 내면의 마음을 풀고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사상이 해원상생이라고 할 수 있다.

## 2) 민족상잔의 상처 해소

우리 한민족은 분단 이후 서로에게 치유되지 못할 잔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한을 품고 사는 특성상 그 잔혹함을 말하려 하지 않고 그냥 덮고 있다. 지금은 그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서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맞서고 있어서 혹은 숨죽이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상처로 인하여 통일이 되더라도 진정으로 화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 경위와 잘잘못을 따지고 용서하고 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족상잔 중 가장 큰 것이 6.25전쟁이다. 전쟁의 피해 중 인적피해가 대단했다.

대한민국 軍의 피해는 총 98만 7천여 명(전사 14만 7천 명, 부상 70만 9천명, 실종 13만 1천여 명)이며, 민간인 피해는 84만 명(피학살자 12만 3,936명, 사망자 24만 4,663명, 부상자 22만 9,625명, 피납자 8만 4,532명, 행불 33만 312명, 북한군으로의

강제징집자 40만여 명, 경찰관 사망자 1만 6,816명 등 모두 1백 40여만 명, 이중 북한군으로 피납된 인원과 경찰 피해를 제외 한 인원)이다. 우리의 총 피해는 182만여 명이다. 북한군의 피해는 5 2만 명이 사망하고 40만 6천여 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 손실은 2백만여 명에 이른다. 총 피해는 2백 92만 명이다. 한편 외국군의 피해도 컸는데 유엔군의 인명손실은 15만 명(이중 14만 명이 미군)이며, 중공군은 90만 명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북한을 합한 우리 민족의 인적손실은 5백 20만 명이며, 당시 남북한 총 인구가 3천만 명이므로 인구 당 6명 중 1명이 사망한 셈이다. 인적손실과 함께 방대한 규모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는데, 북한으로 피랍된 사람이 30만 명이고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 3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하여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성되었다.<sup>37)</sup>

한편 6.25전쟁 시에 남한에서만 12만 3,936명의 피학살자가 발생하였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북한지역에서도 학살이 자행되어 남북한 서로 간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인명살상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9월 중순까지 경상도 지역 일부와 부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점령하면서 시작되었고, 우리 군과 유엔군이 1950년 9월 중순부터 1950년 10월 하순까지 한·만 국경까지 접근한 시기에는 우리측에 의해 자행되었다. 1950년 10월 하순부터 1951년 4월초에는 중공군이 개입하여 다시 서울이 함락되고, 1951년 4월 초순부터 1951년 6월 중순까지는 다시 우리 군과 유엔군이 주도권을 잡아 북상하는 등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보복 살상이 이어졌다. 특히 1948년 4월 3일의 제주 4.3사건과 동년 10월 19일의 여순반란사건으로 시작된 좌익 세력의 활동과 좌우익의 대립은 민족참상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보도연맹원 사건이다. 보도연맹은 우리 정부에 의하여 1949년 10월 좌익인사의 교화 및 전향을 목

37)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박영사, 1989), pp.344-347.

적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가입자가 30만 명에 이르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軍과 경찰에서 이들에 대한 무차별 검속 및 즉각 처분을 단행했는데, 그 사망자가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인민군 점령 시 보복 학살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한과 원이 6.25전쟁이 끝나고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980년 9월 1일자로 연좌제가 폐지되었는데, 직계 친족, 배우자의 인족 및 친지 등이 과거 부역자, 월북자, 피납자, 혹은 좌익경력자일 경우 국민의 공직 진출은 물론이며 해외여행까지도 제한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남북한이 극한으로 대립했던 냉전시대에는 조총련 등을 친척으로 두었거나 납북어부가 송환된 이후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 때문에 간첩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는 그동안 민족상잔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소홀하였다. 이러한 치유의 방치는 여야로, 지역으로, 혹은 이념으로 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화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보상과 위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족 스스로 한과 원을 풀어야 하는데 해원상생이라는 영혼과 마음의 치유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도 모든 국민이 이러한 상처치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빌리 브란트의 진정성 있는 사죄가 유럽의 국가 및 국민은 물론 독일국민의 죄의식과 침략역사를 청산하는 실천적 의식으로 바꾸는데 일조했다는 교훈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 3) 북한 독재치하의 참상과 남북한 간 이질화의 치유

6.25 참상만큼이나 북한에서는 참혹한 환경 때문에 많은 주민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 북한의 숙청과 학살은 해방 초기부터 시작하였는데, 김일성은 해방을 맞이하여 빨치산세력, 연안

과, 소련과 등과 함께 귀국한 이후 국내파(남한출신, 함경도파, 평안도파, 갑산파) 등과 권력쟁탈을 벌여야 했다.<sup>38)</sup> 소련군정이 김일성과 빨치산세력에게 북한의 군, 보안, 치안조직 등 모든 무력 장악을 위임<sup>39)</sup>한 것을 계기로 김일성이 모든 세력을 누르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권력 쟁탈의 와중에 가장 먼저 남로당파와 국내파 등이 제거되었고, 이어서 6.25전쟁 이후에는 소련파와 연안파, 남한의 남로당파가 제거되고, 1956년에는 연안파·소련파·국내파들이 연합하여 도전한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벌이는 한편 군부의 반대세력도 제거<sup>40)</sup>했다. 김정일 또한 삼촌인 김영주, 이복형제인 김평일 등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1974년 4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공표, 수령절대주의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sup>41)</sup>을 통하여 후계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오늘날 김정은 3대 세습체계를 지속하는 것도 이러한 숙청과 강력한 독재 권력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주민의 생활은 어떠한가? 북한 주민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사회적 지위가 정해져 있다. 북한에서 소위 적대계층으로 분리된 하위 30%(상위 30%가 핵심계층, 중간층이 40%의 유동계층)<sup>42)</sup>는

38)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p. 62-63; 김남식, 『남로당연구』 (서울: 돌베개, 1984), pp.13-19. 그 외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 비평사, 1995)

39) 김창순, 『북한 15년사』 (서울: 지문각, 1961), pp.43-61.

40) 당시 숙청된 군부관료: 민족보위상 김창봉, 총정치국장 허봉학, 총참모장 최광, 사회안전상 석산, 경찰국장 김정태(김책의 아들), 총정치국 조직부장 현철해 등. 최광은 그의 부인 김옥순과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의 빨치산 동료관계가 작용하여 복권, 김정태는 1980년대에 복권되어 금성트랙터공장 지배인, 대흥관리총국 부국장 등을 역임하다가 병사, 현철해는 4군단 정치부장으로 좌천된 후 후방군 관학교 교장,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 등을 거쳐 1990년대 초에 총정치국에 복귀 후, 조직담당 부국장에 임명: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p.44-45.

41)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중앙당,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년 4월 14일,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42) 북한은 1958년에서 1970년에 걸쳐 당이 중심이 되어 3회에 걸쳐 주민을 출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직위나 생활을 누리기가 어렵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신분에 따라 입당, 거주 지역, 직위 등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엠네스티의 2013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구의 절대 다수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아사한 경우도 있다. 수만 명이 기소 혹은 재판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나 구금시설에 구금되거나 억류되고 있다. 5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보통 2~5만 명이 수용되어 처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에는 어떠한 인간적 자유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는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북한의 통제체제에 기인한다.<sup>43)</sup>

한편, 통일이 된 이후 남북한 국민 간의 이질화, 즉 삶의 모든 분야에서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질화는 북한의 체제적 부자유와 불법, 국가에 의한 전횡이 오랜 기간 작용한 결과로써 간단히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이질화는 남북한 정치 및 경제체제의 대립, 개인숭배에 따른 의식화, 획일적 집단주의, 문화정책 등에 의해 주민의 사고가 단순하고 경직되었거나 개인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복종적 태도에 젖어 있고, 가부장적인 사회체제 하에서 여성의 헌신과 지나친 인정주의에 몰입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sup>44)</sup> 독일의 경우에서도 구동독 정권의 40여 년의 통치기간에 의해 동독인들의 뇌리에 깊게 새겨진 불법과 박해, 억압과 통제에 대한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이질화된 분야는 경제 분야인데, 구동독의 산업체의 생산성이 구서독의 30% 수준 이하로서 경쟁력이 없었고, 통일 직후 실업자가 전체 근로자의 30%인 300만 명에 육박하였다. 통일 전 동독에서 언론이 개방되고 서신교환이 허용되어 완전히 단절되고 통제된 북한사회처럼 이

---

신성분에 따라 3계층 51개로 분류하여 차별적 계급정책을 추진해 왔다: 통일부, 『북한개요 2000』 (서울: 통일부, 2000); 김영재, 『북한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2), pp.339-340.

43) 엠네스티, 『2013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pp.26-27.

44) 김용대, 「남북한 이질화 극복과 통일교육에 관한 고찰」, 『윤리교육연구』 11; 김상철, 「남북한 분화의 이질화와 동질성 회복방안」, 『북지행정연구』 19 (2003), pp.309-311.



질화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통일된 이후에도 동·서독 국민의 삶의 차이가 쉽게 해소되지 않아 이질화의 폐해를 아직까지 겪고 있다.<sup>45)</sup>

이는 이질화문제의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단 민족의 이질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소위 통합정책이라고 하는데 서독에서는 동독주민을 우대한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식의 급격한 처방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하였고, 시민사회가 중심역할을 담당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서독정부의 역할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동독인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정책을 폈는데,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동독주민들이 통일정부의 소극적 지원태도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등 스스로 일어서는 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 남북한 이질화의 단면 및 해결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이다. 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으로 폄하되어 인식될 정도로 소외되는 상황으로서 우리 국민의 역할은 기대 이하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2등 국민으로 보는 우월적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잘못된 태도보다는 독재 상황에 장기간 노출된 북한주민에 대해서 진정으로 해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한이 깊고, 전근대적인 생활 방식이 몸에 배어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북한 주민의 한을 풀어줌으로써 이질화의 폐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해원상생사상은 독재 치하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이질화된 국민의 간극을 줄이는데 있어서 큰 사상적, 도덕적 지침이 될 것이며, 치유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 가를 알려 줄 것이다.

45) 동독대사관, 『독일 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1996, pp.17-24.

## IV. 결론: 실천적 제언

해원상생 사상은 천지공사에 의해 도래할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우리 스스로 가다듬고 가능하게 해주는 실천사상이다. 아울러 사회갈등의 원인과 대안을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인간의 무한한 가치와 잠재성을 인식케 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공간적 영역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적인 영역과 사회과학적인 영역을 동시에 제공해주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해원상생을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가 요구되는 바, 연구자는 해원상생사상이 학문적 목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과학적인 잣대의 접목 시에도 과학성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고, 천·지·인 삼계에 걸쳐 있는 해원의 큰 뜻을 온전히 인간적인 사고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하였다.

지금 오선위기의 공사에 따른 다층적인 변화가 한반도는 물론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통일은 반드시 도래하며 그 주역이 대한민국이 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원상생 사상은 통일실천적인 가치가 있는 바, 해원상생이 통일 지도자 및 통일 국민의 핵심적인 덕목이며, 원한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우리 국민의 화합을 방해하는 민족상잔의 상처를 해소하고, 아울러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아픔과 너무도 다르게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치유제가 될 것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보면 해원상생사상은 구호 및 자선, 사회복지, 교육, 치안 등 많은 분야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가치가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이미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제반 교육사업 등 3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22개의 분야별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sup>46)</sup> 이와 같은 사업에

부가하여 남한국민 및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한데, 특히 통일 이전과 이후의 교육에 대한 종단 차원의 관심도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종단의 법리에 근거하여, 통일 철학을 정립한 이후에 통일을 위한 대비 방향과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46) 송상범, 「남북한 통일의 해원상생적 접근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pp.84-104.

##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 \_\_\_\_\_, 『大巡指針』,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_\_\_\_\_, 『大巡眞理會要覽』, 대순진리회 출판부, 969.
- 강성학, 『무지개와 부영이』, 서울: 박영사, 2010.
- 강인철, 「종교와 통일운동」, 『종교문화연구』 창간호, 1999.
- 김경동, 「오늘날 사회과학방법론을 둘러싼 쟁점들」, 『현상과 인식』 23, 1982.
- 김남식, 『남로당연구』, 서울: 돌베개, 1984.
- 김방용, 「해원상생 사상과 그 현대적 의의」, 『대순진리학술논총』 4, 2009.
- 김범연, 「종교문화연구」, 한국신종교학회 발표 논문, 2000. 12. 16.
- 김상철, 「남북한 분화의 이질화와 동질성 회복방안」, 『복지행정연구』 19, 2003.
- 김영재, 『북한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2.
- 김영진, 「남북한 통일과 해원상생 사상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용대, 「남북한 이질화 극복과 통일교육에 관한 고찰」, 『윤리교육연구』 11.
- 김웅진·김지희 공저, 『정치학 연구방법론: 경험과학 연구의 기준과 설계』, 서울: 명지사, 2005.
- 김웅진, 『과학패권과 과학민주주의』,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 \_\_\_\_\_, 「과학적 신념, 신뢰와 지식의 패러독스」, 『신뢰연구』 16, 2006.
-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중앙당, 국가, 경제 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 연설, 1974년 4월 14일,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정태, 「해원상생의 실천 방안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4, 1998.
- 김창순, 『북한 15년사』, 서울: 지문각, 1961.
- 김관수 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서울: 학지사, 2000.
-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박영사, 1989.
- 김홍철, 「해원상생사상과 그 실현 이념」, 『대순진리학술논총』 4, 2009.
- 동독대사관, 『독일 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1996. 12.
- 박세일, 「한반도 통일과 불교의 역할」,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7-1.
- 박광수,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원불교」, 한국신종교학회 발표 논문, 2000. 12. 16.
- 박영수,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법리에 의한 남북통일 전망」,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용철, 「해원상생의 실현에 대한 고찰」, 『대순사상논총』 4, 1998.
-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송상범, 「남북한 통일의 해원상생적 접근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양무목, 「통일기반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 『대순사상논총』 4, 1998.
- 엠네스티, 『2013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2013.
- 원영진, 「평화통일과 대종교」, 한국신종교학회 발표 논문, 2000. 12. 16.
- 유재갑, 「해원상생 사상과 영구 평화사상: 그 실천적 의미」, 『대순진리학술논총』 4, 2009.
- 이경원, 「해원상생의 의미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4, 1998.
- 이만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선언의 역사적 의의」, 『

기독교와 통일』 3.

- 이수윤, 『철학개론』, 서울: 법문사, 1996.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 비평사, 1995.
- 이항녕, 「해원상생 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4, 1998.
- , 『현대문명과 대순사상』, 서울: 일심, 2004.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 통일부, 『북한개요 2000』, 서울: 통일부, 2000.
- 岩崎武雄/허재운 역, 『서양철학사』, 대구: 이문출판사, 1987.
- Chava Frankfort-Nachimias & David Nachimias,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 D. Cunningham, *Assessing constructions and constructing assessments: A dialogue. constructivism and the technology of instruction: A conversation*, New Jersey: Lawrence Elbaum Associates, 1992.
- I. Kant/최재희 옮김, 『순수이성비판』, 서울: 박영사, 1999.
-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 S. Warren/이성화 옮김, 『변증법과 정치이론』, 서울: 인간사랑, 1988.

▪Abstract▪

## Haewon Sangsaeng's speculation of social science and its practical value towards reunification

Park Young-taek

Daejin University

Korean reunification would be one of the greatest heaven-earth works by Gucheon Sangje in terms of the lasting paradise of the Later World. The Oseonwigi-gongsa describes what it will b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Haewon Sangsaeng is the very practical means in unifying the two Koreas.

What are the effectiveness of Haewon Sangsaeng, regarding Korean reunification in dealing with the social science? This researcher has found out three main impacts as follows: (1) it deals deeply with the cause of the social conflicts, and it could provide the solutions towards the Later World, (2) it highlights the great values and the potential abilities of human, and (3) it widens the research areas up to the heave-earth-human Samgye.

Dealing with Haewon Sangsaeng in the social science, researchers must consider the limit of the research, which are (1) the tenacity of researcher's goal and the extremity of

the research, (2) the possibility of a fallacy in doing the social science, and (3) the paradox of knowledge.

In conclusion, Haewon Sangsaeng has many fundamental and practical values when it comes to Korean reunification. First, it should be a very important virtue for the unification leadership and the Korean people. Second, it could heal the serious illness, rooted in the Korean War, and many internal conflicts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ideologically. Finally, it also recover North Korean people's severe pain and grief under the long-term dictatorship, and the heterogeneity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for 60 years.

**Key words** : Haewon Sangsaeng, speculation of social science, the practical value of unification, Oseonwigi-gongsa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3년 10월 16일~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13년 11월 19일